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인 쇄 2006년 12월 22일

발 행 2006년 12월 22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경제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임강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2)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70-1 93340 : ₩7000

322.82-KDC4

337.519-DDC21

CIP2006002837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3
2. 주요 연구내용 및 접근 방법	5
II. 경제공동체 개념과 기존의 논의	7
1. 기본 개념	9
2. 우리 사회의 경제공동체 논의	10
3. 북한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	18
III.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33
1.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론	35
2. 경제통합의 방법론	42
IV. 경제통합과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59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62
2. 경제통합의 경제성장 효과	72
3. 경제 주권과 경제적 고유성 유지	80
4.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쟁 감소	88

V.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	97
1. 한반도 경제의 특성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99
2. 새로운 경제통합 모형의 가능성 모색	104
3.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	112
VI. 결 론: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29
1. 최근의 상황 전개와 시사점	131
2. 정부의 접근 전략: 평화프로세스와 경제협력 병행 추진	134
3. 정부차원의 추진 과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137
참고문헌	1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9

표 목 차

<표 III-1> 경제통합에 대한 4가지 접근 방식	44
<표 III-2> 통합 구조와 과정에 대한 접근방법	49
<표 IV-1> 통합이론에서 제기된 경제주권	83
<표 V-1> 경제통합의 동태적 접근	122

I

서론

1. 문제제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의 채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진전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조치로 인하여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난항에 직면하였으며, 북한은 미사일 실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하는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정세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가 통합되는 상황을 상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년초부터 준비되어 왔던 과제를 겹가지 변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심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본격적인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경우를 상정하여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의 결합도를 증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제통합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북한지역에 대한 단순한 지원성 사업을 뛰어넘어 남북한의 장기적인 공동번영을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의 협력전략을 기획하고 이에 기초

한 북한지역 개발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지향할 경제통합의 성격 규명과 함께,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의 효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 틀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두었다.

우리가 지향할 경제통합 또는 경제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북한 사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정하여 노력해 나갈 때 한반도지역의 경제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북측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경제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경제통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이 고전적인 경제통합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라사류의 분석 틀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종합적인 분석을 생략한 상태에서 부문별 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경제통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새로운 이론 틀은 남한경제의 성장전략과 동북아지역의 공동체 형성, 북한지역의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해법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지향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경제 통합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차원의 경제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외에서 연구되었거나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정책과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어온 학계의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해서 전반적인 경향과 한계 및 보다 바람직한 경제공동체 형성 논의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남북한이 직면한 정치·안보·경제·사회적 국내외 상황에 적합한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온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작업에서는 유럽에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특히 경제공동체의 성격과 비전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와 한반도의 상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를 적용하는 데 일정한 조

정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체제의 상이함, 경제발전수준의 격차, 전쟁 경험 등으로 인한 심리적·이념적 갈등 요소의 상존, 그리고 특히 북한당국의 흡수통일 우려 등의 이유로 남북한 상황에 적합한 경제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과정을 설계할 필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경제통합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의 성격차이를 반영한 ‘2부문 경제모형’, 그리고 남한경제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자본의 투자처로 북한경제를 활용한다는 공간적 돌파구(spatial fix)의 개념을 적절하게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상생의 협력모형’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적용의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을 도출하는 작업은 우리가 지향할 경제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제안을 비롯해서 경제통합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추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며, 한반도 경제통합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틀로서 남북한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에 적합한 ‘한반도 경제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와 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정부차원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경제공동체 개념과 기존의 논의

1. 기본 개념

공동체란 라틴어 ‘Communitas’ ‘Communis’에 어원을 두고 있는 용어로 사전적(辭典的)으로 “공통의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공동체는 근대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사회형태로, 현대에서는 동일한 혈통,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편익 및 가치체계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 생활공간이나 생활방식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갖는 의미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공동의 의식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통의 공간에서 생활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적인 정의를 바로 적용할 경우 남북경제공동체는 “한 민족으로서 경제생활에서 같은 목적과 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생활하는 집단”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공동체의 성격이나 경제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각 참여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인식, 경제체제의 성격과 경제발전 수준, 일반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가치관, 당국의 경제주권에 대한 의지,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괴리가 존재하며, 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적합한, 그래서 남과 북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공동체 논의

가. 정부차원의 논의

분단 이후 국제적으로 형성된 냉전질서 속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교류와 협상을 거부하였다. 남북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70년대 초반 동·서 냉전의 조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8·15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1970.8.15)하였으며, 이어 대한적십자사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1971.8.12)에 북한이 호응함에 따라서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남북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이 이어지면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1972.7.4)되었다. 그 결과 7개항에 달하는 「7·4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하면서 남북간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¹

정부차원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은 전두환 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부가 발표(1982.1.22)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한 수준에서 체계화한 것으로, 통일의 원칙을 제시하고, 남북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마련, 선거를 통해서 통일국

¹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가를 구성하되,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통일의 원칙으로는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잠정협정」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으로 “분단고통과 불편해소와 민족적 신뢰·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이 제시되었다. 민족경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 제시로 통일방안에 새로운 물길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부는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경제통합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노태우 정부이다.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제사회의 냉전체제가 빠르게 해체되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을 통해서 남북통일의 자주적·적극적인 추진을 천명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²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민족

² 「민족공동체」에 대한 노태우 정부의 기본 개념은 당시 통일원장관이었던 이홍구씨가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특강(1988.4.25)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민족공동체의 내용은 하나의 사회공동체이다. 즉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 자유왕래의 문제 등은 우리에게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공동체의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겠다는 복지공동체란 뜻도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합쳐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작업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경제공동체 건설 등을 통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의 통합이나 경제공동체 형성은 ‘통일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경제공동체의 성격, 형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민의 정부』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1994.8.15)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자는 기조하에서 2번째 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남북화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와 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다음의 ‘남북연합단계’는 통일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체제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전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북 공동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현실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일에 이르는 과정상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개념이나 실천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 활성화·제도화와 관련하여 북측과 국내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은 “남북간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군비축소 및 통제가 실현됨으로써 정전체제가 공공한 평화체제로 전환되었을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남북간에 호혜적 경제관계가 구축되고, 남북한의 주민이 자유롭게 상대방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³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특징은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확대를 양측으로 병행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점과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 강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남북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할

³ 통일부, 『통일백서 2003』(서울: 통일부, 2003), p. 38; 이와 함께 대북정책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인 목표에도 부합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노력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1.3)에서 상호이익·공존공영의 틀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교류·협력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베를린선언』(2000.3.9)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망라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2000.6.15)에서도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들이 경제공동체의 발전방향에 합의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정부』는 통일논의를 지양하고 화해·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추구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사실상의 통일’ 추구 정책은 그 실용성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비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의 제약으로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를 노출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국제사회와 동북아시아의 역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번영 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이라는 목표는 남북 모두의 이익을 창출·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긴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하고자 한다.⁴ 결국,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실현하겠다는 대북정책이자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내재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인 발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분야의

⁴ 통일부, 『통일백서 2005』(서울: 통일부, 2005), pp. 17~24.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주된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성격, 형성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의 관심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집중된 까닭에 그동안 진행된 논의 역시 남북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 보다는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개발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계의 논의

학계에서 이루어진 남북통합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 경우 대북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통일정책의 실천수단이자 목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의 경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남북통합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는 급작스러운 흡수통일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우리의 경제통합에 대한 접근에서 우리의 입장에 편향된 시각이 확산된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한 경제통합 논의의 주요 분석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통합을 위한 초기 단계로써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통합의 방법과 관련된 논의이다. 경제통합의 속도와 영역 그리고 북한의 체제전환 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경제통합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고 필요한 재원조

달방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넷째, 농업, 재정 등과 같은 분야별 경제통합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김대중 정부가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의 대북정책 방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다.

남북경제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통일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통일된 독일에서 급격한 통일의 후유증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급진적 경제통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죽음 이후 북한의 내부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독일식의 흡수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에 입각한 경제통합 방안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다. 이후 급격한 경제통합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점진적인 경제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계적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증가하였다.

경제통합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추계하고 필요한 자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는 독일이 통일 이후 막대한 재원을 동독지역에 투자하게 된 상황과 맞물려 연구자들의 관심을 자극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의

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일의 비용적인 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범주와 계산방식에 따라 추계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 지출된 비용의 투자 측면의 성격을 포함시키고 객관적인 틀을 도입함으로써 균형있고 체계적인 논의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의 작업은 보다 전문화되고 관심은 세분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분야별 경제통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재정 및 조세통합, 농업 및 토지통합, 금융 및 화폐통합, 산업통합, 노동시장의 통합과 적정임금, 그리고 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북한지역의 사유화 등이다. 분야별 경제통합 논의의 문제점은 종합적인 경제통합 논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경제통합이 다른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남한의 산업정책의 변화 필요성과 같은 문제가 외면되고 있어 논의 구조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 북한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

가. 사전(辭典)에서 나타난 인식의 변화

북한에서 사전은 정보가 제한된 외부세계에게 북한의 공식적

인 입장을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북한의 인식과 그것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제사전』(1970년판, 1985년판)과 『재정금융사전』(1995년판) 그리고 『국제법사전』(2002년판)을 비교했다. 이 사전들을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인 접근성 때문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두 권의 경제사전을 비교하면 경제공동체 관련한 설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발견된다. 1970년도에 발간된 『경제사전』에는 관련된 단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는데, 1985년판에는 몇 가지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⁵ 이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경제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다. 특히 ‘경제블럭’과 ‘구라파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당시 북한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느낄 수 있다.

‘경제블럭’을 정의하면서 “내부적으로 공동적인 여러가지 경제 적조절을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집단적으로 배타적인 차별조치를 실시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연합”이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⁶ 이와 함께 경제블럭은 제국주의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착취하기 위해 경제블럭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국주의국가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제블럭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⁵ 경제블럭, 구라파공동시장, 구라파공동체, 구라파자유무역연합, 라틴아메리카 경제체제 등이다.

⁶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20.

경제빨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경제빨력은 경제력이 보다 큰 나라가 연합에 참가한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고 그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할수 있게 하며 외부적으로 배타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나라들간의 대립과 충돌을 더욱 격화시킨다.

경제빨력은 그 경제적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조작된다. 무역빨력의 형태로 조작되는 경제빨력은 참가국들사이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그 밖의 나라들에 대하여 공통적인 관세장벽을 쌓으며 일련의 무역조건들과 관련한 조절을 실시한다. 환자빨력의 형태로 조작되는 경제빨력은 성원국들의 환자제도를 조절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다. 지배력이 강한 나라의 화폐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국들의 환자제도를 예속시키는 환자빨력은 보통 중주국이 자기의 식민지예속국들에 강요하여 조작된다.⁷

또한 『경제사전』은 경제블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공동시장’을 들고 있으며,⁸ 경제블력은 자본주의국가끼리의 알력과 대립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 위기를 조성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라파공동시장’에 대한 『경제사전』의 설명에서도 북한당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미제의 경제적침입을 막고 구라파시장을 지배하며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독점자본주

⁷ 위의 책, p. 121.

⁸ 위 사전에서는 ‘구라파공동시장’을 “미제의 경제적침입을 막고 구라파시장을 지배하며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국가독점자본주의적연합이며 집단적신식민주의기구이며 배타적인 경제빨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국가들이 공동시장을 결성한 목적을 “경쟁자를 구축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성원국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을 집중하며 특히 미제의 경제적 침투에 맞서 서구라파독점자본의 력량을 결속하는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적연합이며 집단적신식민주의기구이며 배타적인 경제빨럭. 정식이름은 《구라파경제공동체(EEC)》”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⁹ 유럽공동시장(경제공동체)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미국이 세계경제의 최강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유럽국가들이 유럽시장과 경제에 대한 서유럽 “독점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연합된 힘으로 착취와 약탈, 해외팽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공동시장은 ‘서유럽 독점자본’들이 주도한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공동시장》을 내온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목적은 경쟁자를 구축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성원국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을 집중하며 특히 미제의 경제적 침투에 맞서 서구라파 독점자본의 력량을 결속하는것이다.¹⁰

1985년판 『경제사전』보다 10년 뒤인 1995년에 발행된 『재정금융사전』은 ‘구라파경제공동체’와 ‘석유수출기구’에 대한 설명만을 담고 있다. 물론 『재정금융사전』이 전문사전을 표방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미묘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용어의 변화다. 1985년판 『경제사전』에서는 ‘구라파공동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부분에 정식이름은 ‘구라파경제공동체(EEC)’라고 덧붙인 반면에 『재정금융사전』에서는 ‘구라파경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설명 내용에서의 변화다. 『경제사전』은 유럽경제공동체를 소개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⁹ 위의 책, p. 197.

¹⁰ 위의 책, p. 197.

『재정금융사전』에서는 이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보장된 것이다.¹¹

추가된 설명으로는, ‘유럽경제공동체’가 “《나토》의 경제적지반으로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영향력이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파급되는 것을 공동으로 막으려고 책동하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의 마찰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암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발전도상국에 대한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협정의 체결, 개발기금의 원조와 무역상의 특혜 등이 제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그러나 『재정금융사전』에는 당시의 상황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는 관심 밖의 문제였거나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용어가 매우 자세하게 개제된 것은 2002년에 발간된 『국제법사전』이다.¹³ 『국제법사전』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 일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용어의 숫자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내용도 이전의 사전에 비해 객관적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국제법사전』에 실린 경제공동체 관련 용어는 ‘경제통합’, ‘경제

¹¹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116~117.

¹² 위의 책, p. 117.

¹³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빨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역’, ‘동아프리카공동체’,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 ‘무역협정’, ‘석유수출국기구’, ‘유럽경제공동체’, ‘유럽경제지대’, ‘유럽공동체’, ‘유럽동맹’, ‘유럽자유무역연합’ 등이다. 이 중에서 ‘경제빨릭’, ‘라틴아메리카경제체제’, ‘석유수출국기구’, ‘유럽경제공동체’, ‘유럽공동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선보인 단어들이다. 특히 ‘경제통합’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통합’은 “경제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것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들 사이에 형성되는 단일한 경제체계”이다.¹⁴ ‘경제빨릭’에 대한 정의¹⁵와 비교하면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중립적으로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법사전』에서 이해하고 있는 ‘경제통합’은 우리의 경제통합론 교과서에 나타난 설명과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통합방식에 따라 특혜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으로 구분된다. 특혜무역지역은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형태이다. 여기서는 가맹국호상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지역외 나라에 대해서는 매개 나라가 독자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자유무역지역은 가맹국호상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외 나라에는 매 가맹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경제통합방식이다. 관세동맹은 가맹국호상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지역외 나라들에는 공동관세를

¹⁴ 위의 책, p. 13.

¹⁵ “내부적으로 일련의 공통적인 경제적조절을 실시하며 외부나라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배타적조치를 취하는 경제적연합”, 위의 책, p. 15.

적용하는 경제통합방식이다. 그리고 공동시장은 관세만이 아니라 가맹국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제한도 완전히 철폐하며 보통 지역통화를 설정하고 환율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경제통합방식이다. 경제동맹은 가맹국간의 다방면적인 교류는 물론 재정, 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도 공동으로 조정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경제통합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로 광범히 이루어 지면서 세계경제를 더욱더 지역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한다.

『국제법사전』에 나타난 ‘경제뿔럭’에 대한 기본 설명은 거의 기존의 『경제사전』(1985년)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기술하고 있다. ‘경제뿔럭’이 지니고 있는 배타적인 속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경제사전』에서는 자본주의국가들이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만 서술한데 반해, 『국제법사전』에서는 “지금까지 조직된 경제뿔럭의 대다수는” 그러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국제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호상간에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과학기술교류와 경제적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와 약탈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부문별 또는 전반적경제뿔럭을 조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레하면 석유수출국가기구, 라틴아메리카경제협력기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이 바로 그러한것들이다.¹⁶

『국제법사전』의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먼저 용어를

¹⁶ 위의 책, p. 15.

서구식 표현으로 바꾼 것이 눈길을 끈다. 이전에 ‘구라파’로 표기했던 것을 ‘유럽’으로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경제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는데서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의 지역적경제기구. EEC조약이라고도 불리우는 로마조약에 조인하고 가맹한 프랑스, 도이췌란드,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지끄, 룩셈부르크 6개 나라의 경제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주관적인 평가는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에 주력한 것이다. 또한 ‘유럽경제공동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유럽경제공동체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는 하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유럽통합》에 의해서 유럽의 지위를 미국과 이전 소련과 더불어 제3세력으로까지 올리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였었다. EEC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동맹을 결성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같은 시장내에서의 자본, 노동의 자유이동, 경제정책의 통일, 자원의 합리적리용과 근대기술의 도입을 시도하며 최대한의 경제성장을 목적하였었다. EEC는 유럽석탄강철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유라톰)와 함께 유럽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거기에서 중심기구로 되었었다. 이 기구는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서유럽동맹 등의 경제적기반으로 되었었다.¹⁸

나. 지도자의 발언에서 나타난 인식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의 관련 발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

¹⁷ 위의 책, pp. 530~531.

¹⁸ 위의 책, p. 530.

해 『김일성 저작집』과 『김정일 선집』을 분석했다. 이 두 가지 문집에서 나타난 경제공동체에 관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직접 경제공동체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김일성 저작집』에서 주로 발견된다. 둘째, 『김정일 선집』에서는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민족주의에 대한 주장이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김일성은 1950년대 초반에는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각종 ‘블럭’과 동맹의 형태로 긴밀한 친선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를 “서로 대립되어있는 다른 세력을 공격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¹⁹ 1960년 후반에 와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움직임을 제국주의자들이 신생독립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침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이 떠벌이고 있는 《구라파공동시장》과 《세계경제의 통합》과 같은것들은 다 신생독립국가들의 경제적자립을 말살하고 이나라들을 자기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음흉한 침략적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²⁰

¹⁹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2돐에 즈음하여(1952년 10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59.

²⁰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1967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538.

이와 함께 김일성은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통합과 지역화 노력을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경제적 세력권 쟁탈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²¹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언급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다. 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은 잘 단결되어있기때문에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고 있다.²² 우회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경제통합이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선집』에서는 경제공동체나 경제통합에 대한 발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최근(2005년)에 발간된 최신판에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의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경제권을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980년대 초, ‘로동신문사’ 일꾼들과의 대화에서 김정일은 민족주의를 세계혁명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추구하되, 세계혁명의 이익을 병행해서 추구하고 국제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민족주의로 흐르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²¹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 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 김일성,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기자들의 파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한 축하연설(1969년 9월 18일),” 『김일성 저작집 2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64.

²² 김일성,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 한 담화(1972년 6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2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32.

신문편집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란다고 하여 민족주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우리는 신문편집에서 민족주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국제주의원칙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한것이며 민족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이 세계혁명과 련관되어있는것만큼 신문편집에서도 국제주의원칙을 구현하여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이 세계혁명의 리익과 잘 결합되게 하여야 합니다.²³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기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민족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것은 민족주의를 고취하자라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것은 ...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혁명전통, 우리당의 지도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²⁴

김정일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발언은 200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다.²⁵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민족주의는 민족의 형성발전과 함께 진보

²³ 김정일,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2년 11월 13일),” 『김정일 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89~290.

²⁴ 김정일,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0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

²⁵ 김정일,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2002년 2월 26일, 28일),” 『김정일 선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적인 사상으로 발생하였으나 지난 시기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고 강조하였다.²⁶ 기존의 혁명 이론이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민족주의를 ‘반사회주의 사상조류’로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 해석했다고 역설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도 민족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해명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선행리론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에서 기본문제로 나섰던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 민족문제에 대하여서는 옹당한 주의를 몰리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부르조아민족주의가 사회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치고있었던 관계로 민족주의를 반사회주의사상조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양립될수 없는 사상인것처럼 여기면서 민족주의를 배척하였습니다.²⁷

나아가 김정일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모두 “로동계급의 리익과 함께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와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1980년대 주장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에 서로 돕고 지지하고 연대하는것이 국제주의입

²⁶ 위의 책, p. 257.

²⁷ 위의 책, p. 258.

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민족들의 구별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국제주의는 나라들사이, 민족들사이의 관계이며 민족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민족과 민족주의를 떠난 국제주의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²⁸

민족주의에 대한 사실상의 재해석으로 이해되는 이 발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위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현시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애국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있으며 온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지향입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북남공동선언에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²⁹

²⁸ 위의 책, pp. 258~259.

²⁹ 위의 책, pp. 261~262.

다. 북한의 인식이 주는 시사점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당국은 남한과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간접적인 접근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남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확대된 최근에 와서는 경제공동체 형성 및 경제통합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남북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아직까지 남한경제에 대한 종속화 가능성과 흡수통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 경제통합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북핵문제가 해소되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접근은 기능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는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도로·철도 연결사업과 같이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의 질적·양적 확대와 국내외 추진 환경이 개선되는 데 맞추어 북한의 인식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경제공동체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국내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시에 남한과의 경제통합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론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은 경제분야 이외에도 정치부문이나 사회부문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학자들의 접근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손병해는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경제통합을 사회·경제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 경제통합을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경제거래구조의 변화 현상으로 파악하는 근대경제학적 접근, 그리고 관세동맹의 관점에서 경제통합을 이해하며 정태적 효과분석을 중시하는 관세동맹 위주의 기능주의적인 접근 등이 그것이다.³⁰

가. 정치경제학적 시각

먼저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경제통합을 관찰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르달(Gunnar Myrdal)을 들 수 있다.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미르달은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을 “기회균등이라는 서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³¹ 기회균등의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직업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가 통합

³⁰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서울: 법문사, 2002), pp. 16~19.

³¹ G. Myrdal, “Economic integration’ is the realization of the old western ideal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6), p. 11.

되었다는 것은 그 경제의 모든 이익이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관습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open)있고 생산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르달은 이러한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a social process)의 변화는 아주 추상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을 넘어선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미르달에게 있어서 경제통합은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사회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다.

기회균등의 점진적인 실현은 또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되는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르달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지니는 특징은 형성과정에서 내부의 응집력(cohesion)과 연대성(solidarity)이 강화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연대성을 더욱 느끼게 되고 공동의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전체 공동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치적 결정에 따른 공동비용을 골고루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²

여기에서 미르달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이상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미르달은 산업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상에 더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³³ 미르달은 또한 국내통합을 국

³² *Ibid.*, p. 11.

제통합의 전 단계이자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르달은 국제적 경제통합이 부진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국가간에는 사회적 응집력이나 연대감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몇몇 국가들에서의 국내 통합과정과 이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제들의 완결성이 현 단계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국제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충성도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³⁴

미르달은 국제적인 통합은 국경을 허무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국내정책을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국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조율의 문제(a matter of coordination)가 된다. 이와 함께 미르달은 국가간의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국가들의 국내정책구조를 국제화하면서 각 국가가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⁵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적 통합을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과정을 좀 더 포괄적인 국제적인 연대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개별국가들이 경제통합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르달은 국제적인 통합의 장애물은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³³ *Ibid.*, p. 12.

³⁴ *Ibid.*, p. 13.

³⁵ “What is needed is an internationalization of these national policy structures themselves, preserving the essential values they represent to the several nations” *Ibid.*, p. 50.

적으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⁶

또한 사회는 이익공동체 전체의 최적목표를 향해 동태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체계의 경제·사회적 질서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이상을 담고 있는 규범(norm)에 의해서 유도되어야 하는데, 이 규범은 공동체 전체의 최적목표를 위해 개별목표를 상호조정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르달은 경제통합을 국경의 제거라는 지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익공동체의 영역 확장이라는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⁷

나. 근대경제학적 접근

근대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통합을 접근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는 틴버젠(J. Tinbergen)과 발라사(B. Balassa)를 들 수 있다.

틴버젠(J. Tinbergen)은 통합에 대한 정의를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로 알려졌는데,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통합의 복합성을 강조하였다.³⁸ 부정적인 측면에서 통합은 “차별적이고 제약을 두는 제도를 제거하고 경제교류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the removal of discriminatory and restrictive institution and the introduction of freedom for

³⁶ *Ibid.*, p. 51.

³⁷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p. 17.

³⁸ J. Tin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Elsevier, 1954), p. 122.

economic transactions)”으로 정의하였으며,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은 “기존 정책과 제도를 조정하거나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the adjustment of existing,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ies and institutions endowed with coercive power)”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틴베젠이 인식하는 경제통합은 경제거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을 통해서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은 시장이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³⁹

또한 틴베젠은 국가간 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며, 이에 따라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경제통합은 이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간의 자유무역과 자유스러운 경쟁,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통합을 인식하는 것이다.⁴⁰

발라사(B. Balassa)는 경제통합을 “과정(a process)이자 상태(a state of affairs)”라고 정의하였다. 동태적 개념인 과정으로서의 통합은 “다른 나라들간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태적 개념인 상태는 “차별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가 없다는 것(the absence of different forms of discrimination)”을 의미한다.⁴¹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경제통합이 그 자체로 목

³⁹ *Ibid.*, p. 95.

⁴⁰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p. 18.

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
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발라사는 경제통합이론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시장 크기의 경제학, 규모의 경제, 경쟁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경을 초월한 시장 규모의 확대 효과를 개념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은 경제적 범주를 국가단위로 나눔으로써 야기되는 생산 활동의 왜곡문제를 치유할 것이다. 또한 확대된 시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지역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교류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통합은 기업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상호연계관계를 가지는 기업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상호의존관계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지속되고 발전함에 따라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은 국가적 한계 내에서의 시장 확대 경향은 약화시키는 대신에, 지역 차원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⁴²

발라사는 경제단위간의 차별제거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경제통합을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및 완전한 경제통합이 그것이다. 발라사의 경제통합 단계를 구분하는 이러한 방식은 경제통합이론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⁴¹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1), p. 1.

⁴² *Ibid.*, p. 192.

다. 관세동맹을 통한 접근

관세동맹이론은 역내의 국가간 관세의 차별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바이너(J. Viner)에 의해서 개발되고 미드(J. E. Meade), 립시(R. G. Lipsey)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경제통합의 여러 형태 중에서 관세동맹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분석을 체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이론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바이너(J. Viner)는 경제통합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동맹이론의 기초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⁴³ 바이너의 연구결과는 이후 지역차원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정이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는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론적 접근 노력은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드(J. E. Meade)는 경제통합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제거래에서 균형에 도달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격과 교역조건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⁴⁴ 이를 통해서 소비의 대체효과를 강조한다. 미드가 주장하는 것은 관세동맹을 통한 무역창출 효과는 후생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무역전환 효과는 총무역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립시(R. G. Lipsey)은 관세동맹이론에 차선이론(second-best

⁴³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s*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for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⁴⁴ J. E. Meade,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msterdam: North-Holland, 1955).

theory)을 도입하였다. 립시가 주장한 것은, 지역통합이 형성되었을 때 차별관세를 낮추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차별관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개별국가의 후생이나 전체적의 후생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동맹을 통해서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하는 시각에서 강조하는 것은, 경제통합을 형성할 경우 참여국가와 비참여국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관세에 의한 차별화이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관세동맹의 영역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경제통합의 방법론

경제통합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통합이론 관련 연구 주제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합의 경우, 정치적 통합의 틀에서 경제분야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치통합의 한 부분으로 경제통합을 분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통합이론은 발라사가 주장한 통합 단계별 접근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통합과 관련한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역시 유럽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통합의 추진방식에 대한 발라사의 ‘단계별 경제통합 방법’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을 담아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어려움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관련 연구실적의 빈곤으로 인한 자료의 부족이다.

가. 통합 형태의 비교 분석

손병해는 경제통합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경제통합의 다양한 방법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⁴⁵

첫째, 경제통합의 형성 주체와 통합의 동기에 따라서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은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국가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경제통합 방식을 의미하며,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은 시장내에서의 이윤동기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국제적 차원의 경제활동이 집중됨으로써 지역경제권이 형성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통합의 형성 주체가 정부인 경우에는 제도적 통합이고 시장인 경우에는 기능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의 동기가 시장의 이윤추구에 의한 것이라면 기능적 통합이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제도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는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것이다.

제도적 통합의 경우, 경제통합의 주체가 정부기구이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경제통합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을 유도하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기능적 통합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통해서 연관관계와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결속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특징이 있다.

⁴⁵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pp. 21~27.

둘째, 통합추진의 목표와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가에 따라 연방주의적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으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식으로 연합주의적 통합과 신기능주의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표 III-1> 경제통합에 대한 4가지 접근 방식

목적 \ 변수	초국가적 체제의 구축	정부간 협력체제의 구축
정치적 요인	연방주의(federalism)	연합주의(confederalism)
경제·사회적 요인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기능주의(functionalism)

출처: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p. 23.

연방주의적 통합은 초국가적인 기구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기능주의적 통합은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경제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⁴⁶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 신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능주의는 경제·사회적 분야의 기능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초국가적인 체제의 구축이라는 연방주의적 통합방식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위, ‘기능주의의 탈을 쓴 연

⁴⁶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에 대한 비판은 기능주의가 기능을 주로 강조하면서 법, 제도, 권위있는 기구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서 경제·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적 환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주의'라고 평가되고 있다. 신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은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슈만(Robert Schuman)이 1950년에 발표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형성을 위한 계획(슈만 플랜)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신기능주의의 기본 출발점은 기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유사성이 있고, 동시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신기능주의가 기능주의와 유사한 점은 복지와 구성원들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며, 개인과 집단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의 이전이 자유로운 다원주의적인 사회의 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복잡한 경제주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경제·사회적 영역에 주목하는 데 반해 신기능주의는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시되는 영역을 선택하여 이것을 통합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톱니바퀴들이 물려서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부분적인 통합의 확장을 통해서 초국가적인 시스템의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셋째,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수평적 상호의존관계인가 수직적 보완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경제력 격차가 크거나 산업발전의 단계에서 차이가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또한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적 파워가 큰 국가와 미미한 국가사이의 통합에서도 발견된다.⁴⁷ 수직

⁴⁷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한 세력 확장을 추구했던 제국주의시대에 나타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경제통합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적 통합에서는 상대방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지만,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관계의 심화나 경제의 종속화 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간에 형성되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수평적 통합은 수직적 통합에 비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큰 반면에 경제적 자주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통합대상 영역이 부분적이냐 전면적이냐에 따라서 부문별 통합과 전면적 통합으로 구분된다.

부문별 통합(sectoral integration)은 통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부문에 국한하여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 생산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분적인 통합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면적 통합(general integration)은 관련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경제통합의 당면 목표를 역내시장의 확대에 두느냐, 아니면 역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은 특혜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경제통합의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에 적극적 통합(positive integration)은 역내무역의 자유화에서 나아가 공통관세와 같은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을 의미한다.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 통합 구조와 과정을 통한 정치적 접근

경제통합은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국제적인 환경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라사는 전쟁의 방지, 세계정치에서 제3세력의 창조, 세계 파워로서의 서유럽 재구축 등이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과정은 다르다. 정치학자들은 경제통합이 자유교역을 위한 정치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통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경제학과 다른 국가나 사회조직과의 정치적 조정과정의 일부로서 경제학적 접근이 갖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발라사는 정치적 동기가 시작 단계에서 경제통합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경제부문의 통합은 정치적 영역과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이런 점에서 국가간의 경제통합은 지리적 경계를 사이에 두고 안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경제적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이 갖는 상호보완성에 주목할 경우, 경제통합에 대한 방법론의 기초를 정치통합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방법론에 대한 뿌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통합론에 대한 기본적인 경향과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치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국

⁴⁸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p. 6.

⁴⁹ *Ibid.*, p. 7.

제적인 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⁰ 이에 따라 정치통합에 대한 연구는 국가주권주의적 접근(statist approach)과 초국가적 제도주의적 접근(supranational institutionalist approach)에 집중되어 있다. 통합이론에 대한 국가주권주의적 접근방식은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시스템 변화(a change in the inter-state system)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에 초국가적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은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와 연방주의(federalism)로 대표되는데, 여기에서는 통합을 국제적인 기구가 최종적으로 국가를 대체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개별국가를 통합하여 초국가적인 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양하다. 접근방식의 차이점은 통합 체계와 과정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접근방식을 설명한다.

다원론자(the pluralist)들은 전통적인 국가간의 외교를 강조하며,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정치적 요인은 외면하고 대신에 후생에 초점을 맞춘다.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정치적 발전과 엘리트집단의 형성을 강조한다. 연방주의자(federalist)들은 거대한 초국가적 기구가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⁵⁰ B. M. Weiss, "The Economics of Integration, The Politics of Regionalism: Interdependence and Integration Theory revisited,"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40th Annual Convention, (Washington, D.C. Feb. 16~20, 1999).

이상의 네 가지 접근방식의 주요 차이점과 특징은 다음의 표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표 III-2> 통합 구조와 과정에 대한 접근방법

		다원주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최종 결과	구조	국가들의 공동체	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초국가적 의사결정체계	초국가적 기구
	핵심 목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시적 대화 통로 구축; 원활한 흐름	구조와 기능의 적절한 관계 설정; 필요의 만족	결정권의 집중 (범위와 수준)	힘의 분산 (공식과 비공식)
진행 과정	체계	상호의존성의 지속적인 자력성장; 비공식적 구조	기술적 자기결정; 기능적 필요와 기술적 변화의 절박성	정치발전; 전방연계를 통한 중앙기구의 성장	헌법적 개혁; 힘과 권한의 극적인 재분배
	국가	의사결정, 정보, 반응 등의 능력 증대	기술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	정부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과정	엘리트간의 협약 체결
	개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학습(엘리트와 대중)	새 기구를 통해 공동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협력의 관례화	엘리트의 태도와 관련한 성공적인 의사결정과 분쟁 해소	정부의 수준에 따른 충성도의 차별화

출처: Charles Pentland,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Faber and Faber Limited, 1973), p. 190; B. M. Weiss, "The Economics of Integration, The Politics of Regionalism: Interdependence and Integration Theory revisited,"에서 재인용.

다. 유럽통합의 진행과 방법론의 발전

유럽지역에서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가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통합이론도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화론적인 사고가 반영된, 통합 논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작업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통합이론의 주요 이슈의 변화⁵¹

통합이론의 진화는 1960년대 통합을 설명하려는 노력(explaining integration)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합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왜 유럽에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당시 통합이론의 주요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통합이론에 대한 논의의 양상이 변화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거버넌스(governance) 차원에서 유럽의 통합과정을 분석(analysing governance)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관심사항은 ‘EU는 어떤 종류의 정치체제인가?’,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들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EU의 규제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이다.

1990년대 이후 통합이론의 새로운 경향은 EU를 어떻게 건설(constructing the EU)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서 ‘통합의 사회·정치적인 파급효과’와 ‘통합과 거버넌스의 개

⁵¹ Thomas Diez and Antje Wiener, *European Integration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7.

념화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 통합이론의 단계적 진화⁵²

첫째, 통합문제에 대한 초기 단계의 사고(思考)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How to avoid war?)'에서 출발하였으며, 연방주의(federalism), 기능주의(functionalism), 상호행위주의(transactionalism) 등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주의(federalism)은 유럽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정치가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이론적 가설을 제공하였다. 연방주의자들의 목표는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것으로서, 분쟁을 야기하는 국가 대신에 유럽국가들의 연방체계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주의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연방제도를 심층 연구하여 적절한 유럽정치체(European polity)의 설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들의 실현 전략은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경제·사회정책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이 국제적 대리인(agency)의 등장을 촉발시킨다는 고전적인 지역적 통합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⁵³ 이 대리인들은 경제적 후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강력한 국제기구의 존재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을 극복하며,

⁵² <www.jpes.eu-frankfurt-o.de/Lehre/wise2006/lecture%205-1-2006%20-%20theory.pdf>.

⁵³ 기능주의자들의 주요 주장과 핵심 내용은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저술, *A Working Peace System*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3)에 기초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국제적인 정부 형태(a sort of international government)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자들의 추진 전략은 ‘기능은 형식을 수반한다(form follows function)’는 것이다. 기능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들며(poor record of prediction), 과학적인 엄격함이 부족하다는 점(lack of scientific rigor) 등이 거론된다.

상호행위주의(transactionalism)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하나의 제도적 연합체를 형성하는 형태의 안보공동체를 구상한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심화 정도는 참여 국가간 대화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대화와 교류는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 통합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통합이론의 주요 과정은 통합의 결과 및 통합 움직임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방식으로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신현실주의(neo-re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등이 대두되었다.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하위정치(low politics)분야의 통합과 전략적인 경제분야의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며, 통합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권위기구(a high authority)를 설치하고자 한다. 신기능주의는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이 강조한 힘의 정치를 대신해서 초국가적 통합정치(supranational consensus politics)를 강조한다. 신기능주의에 따르면, 특정 부문의 경제통합은 관련된 다른 부문의 경제통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

국에는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통합으로 확산된다. 신기능주의에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을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초국가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통합과 초국가적 제도화는 경제통합의 부차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신현실주의(neo-realism)에서 고려하는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면서 공식적·기능적으로 동일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개별국가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통합의 속도와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는 정부간 협력주의(intergovernmentalism)와 맥을 같이 한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절대적인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환경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현실주의적인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상대적인 이익의 크기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이전까지 유럽의 통합을 냉전에 대한 반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현실주의는 유럽연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 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잘못은 신현실주의가 국가의 합리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적 기구의 성격을 무정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자(constructivist)들은 국제사회에 현실로 존재하는 실체들을 관념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구성주의자들이 중요시 하는 관념적인 요소는 규범적인 차원과 도구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도와 집단적인 의도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념적인 요소의 의미와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 및 장소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국제정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관념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구성주의자들에게 ‘사회적 현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현실은 제도와 구조, 그리고 행위자의 속성들을 포함한다.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에서 제기되는 유럽통합과 관련한 논의 주제들은,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가 국제체제에 미치는 효과, 국가적 규범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럽 전체의 가치체계가 국내 정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등이다.

셋째, 유럽정치체(European polity)가 진화하면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EC/EU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정치조직이 작동하는 원리를 분석하는 이론은 크게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governance),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협의주의의(consociationalism) 등이 부각되었다.

다층적 거버넌스 접근방식(multi-level-governance approach)의 출발점은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행사되는 권한들이 겹친다는 사실(the existence of overlapping competencies among multiple levels of governments)과 정부의 다양한 수준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주체들의 상호작용(the interaction of political actors across those levels)이다. 여기에서 회원국가의 정부는 정치적 주체 중의 하나로 간주될 뿐이다. 국가가 국내정치와 다른 나라 정부와의 협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층적 거버넌스에 입각한 통합주의자들은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할 체제로 다층적 정책 네트워크(multi-level policy networks)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통제체제(the structure of political control)는 정책 영역(policy areas)에서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간주된다.

신제도주의자(neo-institutionalist)들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s matter)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학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파에 따라 제도의 의미, 제도의 중요성, 또는 제도가 초래하는 차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견해가 다르다. 여기에서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⁵⁴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신제도주의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인간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그룹에서 제도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만, 일단 존재하면 장래의 행동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은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를 중요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전략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제약조건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어떠한 국가는 효

⁵⁴ 신제도주의자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합리적 선택주의자들은 제도가 정치적 행위자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인식한다. 역사주의자들에게는 제도가 정치적 행위자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때로는 제도가 개인과 집단의 선택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본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들은 제도가 사회나 문화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변수에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인식한다.

울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반면 다른 국가는 그렇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은 제도를 통해서 힘이 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주의자들보다 제도가 정치, 정책, 그리고 정치사를 결정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한다. 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이 정치행위자가 철저할 정도로 합리적인 효용극대화론자라기 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주의자(satisficer)이며, 정치행위자들의 전략뿐 아니라 목표까지도 제도에 의하여 설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정치행위자의 목표, 전략,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설명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이익극대화 행태라는 합리적 선택주의자들의 가정이 설명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정치행위자들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구성(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격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구성이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e)이며 종종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만들어지고 작동되는 논리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학자들이 제도 자체가 사회 또는 문화와 같은 더욱 규모가 크고 높은 차원의 변수에 의존한다고 보며, 따라서 행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⁵⁵ 이에 의하면 개인의 결정은 제도적

⁵⁵ 제도를 사회적 실체라고 인식할 경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규범과 관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성주의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

으로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와 같은 더욱 높은 차원의 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규칙, 절차, 그리고 조직의 표준 및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관례와 관습을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제도, 규칙, 절차, 그리고 규범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론의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는 국가나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지만 부드럽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협의주의에 따르면, 다수와 소수 사이에 장기화된 갈등에 의해 사회의 균열구조가 고착화된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경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권력분점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대결을 피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주의 이론은 분열과 협력(또는 통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익한 모델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주의가 발달한 국가는 사회적 분열(societal segmentation) 현상, 비례주의(proportionality),⁵⁶ 정치적 엘리트 중심,⁵⁷ 타협과 합의에 의한 결정 등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⁵⁶ 비례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소수파에게 일정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⁵⁷ 각 집단의 정치적 엘리트들이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경제통합과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경제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더 있다.⁵⁸

첫째는 통합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 무엇을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통합의 대상으로는 시민, 시장, 생산물, 소비, 상품, 서비스, 지역, 생산요소, 화폐, 자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만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모두를 통합시킬 것인가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의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둘째는 경제통합의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국가간에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진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경제통합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셋째는 경제통합의 핵심(the essence)에 대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통합의 핵심을 ‘이동성 강화를 통한 무역의 확대와 분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⁵⁹ 이에 따르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상대국가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간 비교우위의 특화 수준의 추이를 통해서 경제통합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교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동질화 정도를 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⁵⁸ Miroslav N. Jovanović,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 7.

⁵⁹ F. A. Machlup, *History of Thought on Economic Integration* (London: Macmillan, 1979), p. 43.

받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무엇이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한처럼 체제와 제도 그리고 가치관에서 괴리가 큰 상대와 함께 추진하는 경제통합은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가치적인 측면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몇몇 제한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특히 경제통합의 파급효과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남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통합과정에서 제기될 과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지역간 격차의 해소

유럽에서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제기된 논란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주제는 경제통합이 국가간,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경쟁이 소규모 지역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통합이 발전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과 지역들 사이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의

낙관주의자들은 유럽지역의 개인소득 격차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통화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유럽지역차원의 경쟁은 기회의 균등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의 경제도 점차 부자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반면에 비관주의자들은 지금의 소득격차는 계속 해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간에 직업과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파괴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일인당 소득 격차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와 같은) 재분배 수단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한다.⁶⁰

가. 이론적 접근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이론적인 토대를 토대로 발전해 오고 있다. 먼저, 경제통합이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는 견해는 신고전학파의 성장모델에 근거를 두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소로우(Robert M. Solow)의 신고전학파 성장모델에 따르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수렴이론).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인소득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압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도 이윤이 높은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생산요소의 한계수익율이 감소하고, 저개발지역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

⁶⁰ Andreas Rees and Michael Sonnenholzner, “Competition among the regions in EUROLand: “rich here-poor there”?,” <http://www.hypovereinsbank.de/media/pdf/rese_eust_ripo_engl_29366.pdf#search=competition%20among%20the%20regions%20in%20EUROLand>.

에 자본의 흐름은 성장의 중심지에서 좀 더 가난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개발지역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유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이 저개발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가속화(an economic “catch-up” process)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통합이 소득격차를 확산시키게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⁶¹ 첫째가 가장 잘 알려진 ‘순환 및 축적의 인과관계 모델(the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 model)’이다. 이 모델은 미르달과 허쉬만(A. O. Hirschman)에 의해서 주장된 것인데 특히, 미르달은 경쟁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소로우와는 반대로, 생산요소의 이동이 임금수준과 자본의 수익률을 평균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개발지역에서 부유한 중심지로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자와 같은 능력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부유한 경제의 중심지역에는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난한 주변지역에 관심을 보이지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이 부유한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르달은 이러한 현상을 ‘역류효과(backwash effects)’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서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균등화를 위한 재정 장치(Fiscal equalization mechanisms)’가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는 페로우(F. Perroux)가 주장한 ‘성장 극 이론(growth

⁶¹ <<http://homepages.uel.ac.uk/K.Bain/regional.html>>.

pole theory)’이다. 이 이론에서는 핵심 제조업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제조업분야는 다른 분야의 활동을 산업연관체계를 통해서 끌어당기고, 이들을 상류부문(upstream) 활동과 하류부문(downstream)의 활동으로 구분한다.⁶² 그래서 새로운 산업단위가 경제적으로 침체된 어떤 지역에 설치되면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통해서 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산업은 하나의 극(pole)을 이루면서 그 지역의 기업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도적인 극(pole) 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2차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지역이 노동력과 자본을 독점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환경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심과 주변부(center/periphery)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⁶³

셋째는 포드주의자 모델(Fordist/post-Fordist model)이다. 이 이론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전후(戰後)기간 동안 경제분야의 행위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규모 시장으로 형성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본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독점주의적 축적(monopolistic accumulation)’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분야는 번창하는 극(pole)이자 중심부(center)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생산과 노동력이 특정 지역에

⁶² 석유산업을 예로 들면, 상류부문은 석유채굴과 관련된 부문이 되고, 하류부문은 수송·정제·판매와 관련된 부문이 된다.

⁶³ 중심과 주변부 주장은 지역간의 불균형성장은 주변부의 수요보다 중심부의 수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간의 불균등 현상은 과거 경험과 실적이 누적되어 온 동태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요소를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경제발전, 정치, 역사, 전통, 문화와 관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실증적 검증 결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이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지 아니면 심화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는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경우, 유럽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추진되어 온 경제통합의 경험은 어느 한쪽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리즈와 소넨홀즈너(Andreas Rees and Michael Sonnenholzner)는 공동으로 1900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의 통계를 활용하여 유럽지역과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⁶⁴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국가를 세분화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였으며,⁶⁵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5개 국가를 별도로 살펴보았다.⁶⁶ 전체적인 검증 결과는 분명하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⁶⁴ Andreas Rees and Michael Sonnenholzner, "Competition among the regions in EUROLand: "rich here-poor there"?"

⁶⁵ 독일의 경우 22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⁶⁶ 대상이 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개 국가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포함된다.

만, 유럽지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검증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EMU 국가들 사이에서와 미국연방 내에서는 개인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전체(EUROland) 차원에서는 수렴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유럽 전체적으로 소득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역차원의 경제정책이 확대될 경우 유럽지역의 소득격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고 유럽지역의 생활수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60~2000년 사이 유럽통합을 추진한 실적에 따른 경제적 불균등 완화/확산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패트라코스, 로드리게스-포즈와 로볼리스(G. Petrakos, A. Rodriguez-Pose and A. Rovolis) 공동 연구에서도 소득격차의 수렴성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다.⁶⁷ 2001년 기준, 15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검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유럽연합 국가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득의 불균등은 단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성향(pro-cyclical behavior)을 보이는 가운데, 불균형이 확산되는 기간은 증가하고 반면에 축소되는 기간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

⁶⁷ G. Petrakos, A. Rodriguez-Pose and A. Rovolis, *Growth, Integr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in Europe* <www.ersa.org/ersaconfs/ersa03/cdrom/papers/46.pdf>.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과 자원의 분배가 지역에 걸쳐 점점 더 균등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이 지역간의 소득 불균등성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불균등성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소득의 불균등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고딩유와 마메테(Manuel M. Godinho and Ricardo P. Mamede)가 유럽지역에서 기술적 격차가 수렴하는지를 분석하는 공동연구를 통해서 경제력 격차의 수렴 여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다.⁶⁸ 1960년부터 1995년의 기간 사이에 EU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패트라코스, 로드리게스-포즈와 로볼리스의 공동연구에서와 같이 일정한 주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격차가 수렴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는 따라서 불균등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에는 다시 수렴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그 경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통합이 소득의 불등성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기간과 분석 대상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

⁶⁸ Manuel M. Godinho and Ricardo P. Mamede,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Europe: what are the main issues?*(preliminary Draft, 1999.5.26), <[www.pascal.iseg.utl.pt/~converge/pdfs/\(6\).pdf](http://www.pascal.iseg.utl.pt/~converge/pdfs/(6).pdf)>.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통합이 소득의 불균등을 악화시킬 것인지 완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통합에 참여한 국가의 성격을 포함한 초기 조건과 소득의 불균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경제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정책적 시사점

주기적인 변화와 별도로 유럽의 특정국가 즉, EMU 국가들 사이에서 소득격차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조건 이외에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경제력의 불균등성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보여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⁹

일반적으로 수렴현상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특히 노동력의 이동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럽지역에서는 설득력이 제한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이동에 언어적 장벽과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노동력의 이동이 소득의 수렴현상에 기여한 비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렴현상의 발생은 자본의 이동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본이 부유한 지역(the prospering core)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변부 지역(the peripheral areas)에 더 많이 투자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로우는 자신의 성장모형을 활용해서 생산요소의 투입에 따른 한계소득

⁶⁹ 이하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리즈와 소넨홀즈너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arginal income)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낮은 일인당 소득을 가진 지역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보수도 높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부분적인 해답만을 제공할 뿐이다. 요즘처럼 대량생산시대에는 ‘규모의 경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이동도, 한계소득의 감소 현상도 미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 재정적 재분배정책의 효과이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정책(fiscal equalization measures)이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이전지출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조세제도를 통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환율정책의 효과이다. 특히 EMU 국가들 사이에서 격차가 감소한 것은 환율정책을 통해서 국제수지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마다 최고의 조건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정책으로 세제 혜택의 제공과 교육 및 교통망과 같은 투자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렴현상의 이유는 ‘균형잡힌 경제구조(a well-balanced economic structure)’를 구축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EMU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산업들을 국가경제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별 산업의 실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을 상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정 산업에 집중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격차 해소되는 현상을 보여주지 않

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정확한 것이라면, 산업간의 분업현상이 심화될수록 소득격차의 해소는 어려워질 것이며, 지역차원의 경제 충격이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은 지역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역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점이다. 재정의 이전지출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즉 ‘독이든 사탕(sweet poison)’이라는 것이다. 지역차원의 자구 노력과 소득 격차의 수렴 과정을 추동하는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분배정책 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소득이 낮은 지역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전략이 있다. 첫째, 지역 스스로의 추진 역량을 강화(boosting subsidiarity)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전국적인 수준에서 고정된 임금체계를 두지 않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낮은 임금비용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목적에서 도입되는 보조금 지급제도는 지역간 경쟁 현상에서 나타나는 추악한 측면이다. 보조금 지급은 근본적인 투자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정책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순수한 경쟁과 소득 격차의 해소 과정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게 된다. 지역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은 경제활

동을 촉진하고 점진적으로 소득이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적인 노력이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면 주변지역으로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도적인 지역을 형성(cluster formation)하는 것은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쟁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지역에 제공되는 유인이 지역들에게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도출된 결론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2. 경제통합의 경제성장 효과

경제통합이 국가간, 지역간 경제적 불균등을 심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못지않게 정책 결정자와 연구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가 ‘경제통합의 경제성장 촉진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성장 효과에 대한 분석은 발라사가 ‘경제통합의 동태학(the dynamics of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주제로 설명한 것이 가장 처음으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발라사에 의하면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 기술의 발전,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경쟁의 촉진, 불확실성의 감소, 경제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

⁷⁰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가. 이론적 접근

경제통합의 성장효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기 전에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다. 그것은 영구적인(permanent) 성장 효과와 잠정적인(temporary) 성장 효과의 차이점이다. 영구적인 성장 효과는 쉽게 말해서 경제통합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증가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성장 효과라고도 한다. 반면에 잠정적인 성장 효과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한다.⁷¹

신고전학과 성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성장잠재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에서는 자본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량과 취업자 일인당 산출물은 투자율=감가상각율+기술진보율이 되는 지점까지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상태에서의 자본 축적량과 일인당 산출물은 기술진보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변화, 효율성의 증가 또는 투자율의 변화는 성장률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은 영구적인 성장 효과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다.

잠정적인 성장효과는 정태적(static) 효과와 동태적(dynamic)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⁷² 정태적 효과는 동일한 투입량에서 산출

⁷¹ 이하의 이론적 접근은 바딩거(Harald Badinger) 논문에 주로 의지하였다. Harald Badinger, "Growth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the case of the EU Member States(1950~2000)," *IEF Working Paper*, No. 40(2001).

⁷² R. E. Baldwin, "On the Measurement of Dynamic Effects of Integration,"

물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효과이고, 동태적 효과는 생산요소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다. 먼저, 정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역비용의 감소, 경제의 촉진, 생산요소 이동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되면 일차적으로 동일한 투입물하에서도 산출물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정태적 효과). 투자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산출물의 증가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축적된 자본량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산출물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동태적 효과).

신고전학과 성장이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이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영구적인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징적인 점은 외생적인 성장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에서는 잠정적인 성장이 투자의 생산요소 축적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영구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그것은 기술진보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부분이다.⁷³

나. 실증적 검증 결과와 시사점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두

Empirica 20(2), 1993, pp. 129~144.

⁷³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논문을 참고.

가지 효과 중에서 어느 쪽이 적합한지를 검증한 연구도 있고, 각각의 효과를 별도로 검증한 연구도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경제통합체에 진입하는 국가에 대한 효과나, 외부성(externality) 효과와 같이 특정한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도 있다.

검증 대상에 대한 차이점과 함께 나타나는 차이점은 방법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우선적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통합의 확장단계에 따라 더미변수를 사용하거나, 인구증가나 총 GDP를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회원국간의 무역량을 사용하거나 회원국의 총 무역량에서 상호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 단계의 과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산함수가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분석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접근방식(econometric approach)이 도입되고 있다.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표준 성장회기 분석(standard growth regression analysis),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등이 그것이다.

란다우(Daniel Landau)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주는 성장효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⁴ 1950년부터 1990년의 기간 동안 OECD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EEC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의 차이점을 검증한 결과 통계

⁷⁴ Daniel Landau, "The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common Market to the Growth of Its Member Countries: An Empirical Test,"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131(1995), pp. 774~782.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경제통합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헨릭손과 트로스텐손(Magnus Henrekson and Rasha Torstensson)은 횡단면 회귀분석방식을 동원하여 EC와 EFTA에 참여한 효과를 분석하였다.⁷⁵ 이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정(positive)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significant)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C와 EFTA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제어변수(control variables) 집단의 변화와 추정 에리(measurement errors)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결과는 지역차원의 경제통합이 자원의 재분이나 장기적인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를 분석한 바딩거(Harald Badinger)의 연구에서는 영구적인(permanent) 성장 효과와 잠정적인(temporary) 성장 효과의 가설을 검증하였다.⁷⁶ 1950년부터 2000년간의 통계를 사용하고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pproach)과 패널 분석(panel approach)을 동원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장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영구적인 성장효과’

⁷⁵ Magnus Henrekson and Rasha Torstensson, "Growth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No. 1465(1996).

⁷⁶ Harald Badinger, "Growth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the case of the EU Member States(1950~2000),"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중기적인 성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잠정적인 성장효과’ 가설은 받아들여졌다. 결국, 영구적인 성장효과는 확인되지 못하였지만, 잠정적인 성장효과는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럽통합이 전후(戰後) 유럽의 경제성장을 촉진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1950년 이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럽국가 회원국들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통합의 효과 중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외부성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의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⁷⁷ 일반적인 생산체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EU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5~2000년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이어 EU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적 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통합의 단계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6개국(초기 단계(1951년), 추가적으로 9개국(참여함으로써 단일시장을 구축한 확장 단계(1993년))로 구분하였다.⁷⁸ 연구 대상의 기간 동안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성장 효과가 의미있는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3년을 기준으로 하는 회원국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적 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⁷⁷ Jeffrey P. Cohen and Catherine Morrison Paul, “Production Externalities, Integration and Growth: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Single Market,’” Harry Bloch, ed.,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Global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Press, 2003), pp. 53~66.

⁷⁸ 초기 단계에 참여한 국가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고, 추가적으로 참여한 국가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이다.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시경제학이나 지역경제학에서 지역적 경제효과(location economies), 또는 집단적 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라고 인식하고 있는 개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경제통합의 성장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교류의 공간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공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지니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브로드체키(Tomasz Brodzicki)는 유럽경제통합의 효과를 중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⁷⁹ 검증 결과에 따르면, 경제통합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실만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968년 관세동맹을 도입한 효과를 주요 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⁰ 반면에 시장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은 개별국가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통합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개별국가의 차원에서는 3개국만이 긍정적인 성장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외에도 단일통화의 도입도 참가국들에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효과는 보다 복잡한 회귀방정식을 동원하여 분석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경제통합에 참여한 기간이 오래되면 성장하게 되고, 통합된 시장의

⁷⁹ Tomasz Brodzicki, "In Search for Accumulative Effect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alizy I Opracowania*, March 2003.

⁸⁰ 5개국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다.

규모가 커지면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중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경제통합의 성장 효과는 경제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동구 유럽국가들의 EU 가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성장효과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단계 회귀분석방법(2-stag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한 레주르, 솔라닉과 탕(Arjan M. Lejour, Vladimir Solanic and Paul J. G. Tang)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EU에 참여함으로써 EU 회원국과의 양자적 교역은 최저 35%에서 최대 82%가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⁸¹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역 증대가 소득을 최소 18%에서 최대 4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EU 경제의 개방성 및 개별국가마다 EU 회원국과의 교역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와 자국의 대외개방성이 확대되고 EU 회원국과의 개별적인 경제관계가 강화될수록 교역량은 확대되고 성장효과도 커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경제통합의 경제성장 촉진효과와 관련하여 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증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증결과가 계량학적 접근방식의 차이, 통계치 표본의 차이, 설명변수의 선택 등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⁸¹ Arjan M. Lejour, Vladimir Solanic and Paul J. G. Tang, *EU accession and growth effects: Does EU accession stimulat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ew member states?*, 30 April 2004. <www.cpb.nl/nl/org/homepages/anl/EU_enlargement_GTAP.pdf>.

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 주권과 경제적 고유성 유지

경제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있어 제약이 커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통합이 심화된다는 것은 상호의존적관계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의 정책방향이나 특정 정책수단의 사용은 다른 참여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은 다른 회원국과 조정하는 범위와 심도가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통합은 개별국가의 정책적 선택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영역과 겹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방법론이 주로 정치경제학분야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정치경제학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법론들의 차이점은 주로 경제주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과정에서의 경제주권의 문제는 경제통합이 포함된 정치적인 통합영역까지를 망라한 통합 전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 이론적 접근

주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통합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주의(federalism) 이론,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이론, 그리고 (자유)정부간 협력주의(intergovernmentalism) 이론이 그것이다.⁸² 여기에서는 이론들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권의 영역과 성격을 의사결정의 수준, 제도적 구조, 세력의 분포, 그리고 가치관 등 네 가지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유럽통합의 연방주의 이론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유럽통합국가(European supra-national state)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 정부, 유럽 의회, 유럽 군대, 유럽의 단일통화, 통합된 유럽의 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고려할 경우, 연방주의 모형은 정치적 주권의 두 차원(유럽 전체 차원과 개별국가 차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둘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유럽통합 진전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차원으로 정치적인 결정권을 집중시킬 경우, 수직적인 형태로 권력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기반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⁸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 모형은 제도화된 연방조직을 헌법이나 연방의 공식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국가들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조율하면서 통합된 시민국가로 발전해 나

⁸² Corneliu Bjola, "Romanian Political Horizons: Political Sovereignty, European Integration, and European Elections," <http://studint.org.ro/Nr7_eng.htm>.

⁸³ 이와 관련, 자치권에 대한 열망, 투명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의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는 분권화된 연방체제(decentralized federal system)를 선호하는 그룹에서 집중화된 연방체제(centralized federal system)가 지니고 있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기능주의 이론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유럽통합 연구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신기능주의 이론이 정치가들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동방 확장정책(eastward expansion)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이 유럽연합의 정치적 조정 작용을 통해서 지역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신기능주의 이론의 가정은 분명하다. 즉, 한 경제분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는 자동적으로 다른 분야의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석탄·철강분야가 통합되면, 파급효과를 통해서 물류·교통분야까지 통합의 효과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집단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국가에게 초국가기구의 결정권을 강화시키도록 요구하는 상향식 압력(bottom-up pressures)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통합이 유럽차원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경제통합과정과 효과의 정치적 조정은 초국가수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기능주의 이론은 고전적인 기능주의 이론과는 달리, 분권화되고 개별국가에서 연방수준으로의 경제주권의 이양이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주권의 이양이 새로운 정치체제의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다.

정부간 협력주의 이론은 유럽통합이 더디게 진전되면서 대두된 신기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정부간 협력주의는 신기능주의 이론의 정치적인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외교정책, 국방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및 국내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기를 원한 것이다. 통합과정이 ‘낮은 수준의 정치(low politics)’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정치(high politics)’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기능주의 이론의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정치 영역에서 보면, 국가간 협력주의 이론이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간 협력주의 이론에서는 경제통합이 초국가적인 시스템이 아닌 단순한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진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더욱 그러한 현상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이론들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통합이론에서 제기된 경제주권

주권	연방주의	신기능주의	정부간 협력주의
주권 행사의 수준	연방국가와 개별국가	연방국가	개별국가
정치적 구조	연방체제	유럽단일국가	개별국가들의 연합체
세력 분포	수직적 권위의 집중	수직적 분산	수평적
지향점	유럽시민국가	유럽국가	유럽국가

출처: Corneliu Bjola, “Romanian Political Horizons: Political Sovereignty, European Integration, and European Elections,”

나. 정책적 시사점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적 주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과정으로서 경제적 주권을 이양하는 순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제를 통합하는 순서와 관련 EU의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제공한다.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경제통상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분야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U 조약상 개별 국가정책간의 조정이나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모두 17개 분야에 달하는데,⁸⁴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통합의 정도가 높은 분야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도 있다. 특히 농업, 통상, 역내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정책은 가장 통합 정도가 앞선 분야로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EU 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공동농업정책(CAP)은 196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EU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CCP)은 1970년 통상정책을 EU 집행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공동체 차원의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장벽제거 조치(TBR)등 공동통상정책을 시행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WTO 등 국제무역협상에서 EU를 대표하고 있다. 역내 단일시장을 위한 공동정책은 1993년

⁸⁴ 상품의 자유이동, 농업, 인력·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 교통·경쟁·과세 및 법령의 조화, 통화정책, 공동상업정책, 사회정책·교육·직업훈련 및 청년·문화·보건·소비자문제,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단일통화정책은 1999년 11개 회원국간에 경제통화동맹(EMU) 제3단계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단일통화(Euro)를 도입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가 이자율을 결정하는 공동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의 4개 분야 외에는 통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분야마다 통합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의 진전이 더딘 분야에서는 회원국이 자치권을 보유하고, EU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거나 EU와 회원국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국간 조세 정책의 조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EU 차원의 과학기술발전 지원, 경쟁제한 행위 규제, EU 차원의 환경개선,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 교육, 문화, 훈련, 연구, 보건 등에서 최소한의 보장 등이 있다.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개별국가들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가치관과 제도적인 틀 사이의 관계를 심도있게 조명한 미르달의 연구는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⁸⁵

미르달에 따르면, 특정 사회 안에서 통합을 통해 그것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회 균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분배가 요구되는데,

⁸⁵ G. Myrdal, "Economic integration' is the realization of the old western ideal of equality of opportunity," 미르달에게는, 경제통합이라는 제도적 개혁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통합을 위한 집단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회평등을 위한 사회의 선택을 일단 제도화한 이후에는 제도의 일체화(identification)와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미르달은 통합의 경제효과로 복지의 증대를 지적하고 있다. 복지의 확대는, 기회 균등을 확산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제도화 작업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르달은 태도 변화의 누적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아무리 작은 제도적인 성과도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통합 과정은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르달은 국제적인 수준의 통합이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제적 제도와 국내적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분쟁(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발전, 평등, 안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⁸⁶ 국제적 차원의 제도와 국내 제도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 내의 개별 그룹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복지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에 반응하는 결과는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를 형성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국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국내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차원에서 볼 때는 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적 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는 특정 국가가 국

⁸⁶ *Ibid.*, p. 33.

수주의(nationalism)이나 보호주의를 지향해서가 아니라 정치집단들이 자국내에서 공유되는 가치(shared and complementary values)를 강조하는 방식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⁸⁷

따라서 국제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국내정책 구조의 국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정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동질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별국가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반영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⁸⁸ 미르달에 의하면, 1950년대 유럽통합의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국가간의 통합과 국내 통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과 함께, 통합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변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합을 추진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험적으로 볼 때, 특정분야에 국한되고 실용적이면서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미르달의 문제의식과 관련, 유럽 통합과정의 성공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적 차원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개별국가들의 고유한 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통합과정과 개별국가의 고유성이 동시에 추구될 때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⁹

⁸⁷ Jones Erik, "Idiosyncrasy and integration: suggestions from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1, February 2003, pp. 140~158.

⁸⁸ G. Myrdal, "'Economic integration' is the realization of the old western ideal of equality of opportunity," p. 151.

⁸⁹ *Ibid.*, pp. 151~152.

4.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쟁 감소

우리가 유럽통합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사실 중의 하나가 유럽지역의 경제적 통합이 이 지역의 분쟁 해소와 평화정착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통합이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경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경제적 결합도가 증가하면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확대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경제적 접촉의 증가가 평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경제교류를 확대하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가설과 관련한 이론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실증적 분석 결과도 국가간 경제적 결속도가 증가하면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 이론적 접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견해, 현실주의적 견해 그리고 비판적인 견해가 그것이다.⁹⁰ 여기에서는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견해와 현실주의적 견해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자(liberalist)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무엇보다 전쟁이나 충돌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분쟁

⁹⁰ Mike M. Mochizuki, *Security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Shorenstein APARC, May 1998. <<http://iis-db.stanford.edu/pubs/10089/Mochizuki.pdf>>.

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안보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교역과 투자가 보다 자유로워지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생산을 통해서 양측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안보분야의 경쟁과는 달리 경제분야에서의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면 교역으로 인한 이익은 절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 평화로운 상업관계 형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이익이 군사적 충돌이나 침략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경제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좋은 정치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국가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작업을 촉진함으로써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분쟁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민주화 촉진 효과이다.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경제적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군사주의와 소비니즘을 극복하도록 하고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자(realist)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안보의 측면에서 세계차원에서의 ‘상대적인 이익’이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절대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실주의자들에게 전쟁이나 평화냐를 결정하는 요소는 국제체제에서의 힘의 분포와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을 키우고자하는 국가에 대항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

가차원의 능력 및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는 개별국가들이 상대국에 더 의존적이 되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상대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종국적으로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국가에 의존적인 국가는 상대국이 교역을 통한 이익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매우 취약해질 것이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는 국가는 자신의 우월한 힘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교류·협력에 따른 미래의 기대치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평화가 촉진되지만 그 기대치가 회의적일 경우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공격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실증적 검증 결과

경제협력의 확대가 분쟁 방지 및 평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각종 분쟁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

기되는 과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쟁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어떤 모형과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호의존성과 분쟁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사용한 통계자료나 분석에 사용한 모형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감소시킨다는 데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닐과 루셋(John R. O Neal and Bruce Russett)은 1950년부터 1992년 사이의 통계치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인접한 국가 또는 강대국 사이에서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분쟁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⁹¹ 동 연구에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는 분쟁의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크고 같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에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오닐과 루셋의 검증 결과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가즈케, 리와 뵘머(Erik Gartzke, Quan Li and Charles Boehmer)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 국가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기상황에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시장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신호모형(model of signaling)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⁹² 이들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첫째, 국가간 교

⁹¹ John R. O Neal and Bruce Russett, "Assessing the Liberal Peace with Alternative Specifications: Trade Still Reduces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4(1999), pp. 423~442.

⁹² Erik Gartzke, Quan Li and Charles Boehmer, "Investing in the Peace:

역 의존도의 증가는 전쟁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에게 전쟁을 피하도록 신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의존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왔던 교역량 이외에 투자나 자본의 이동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플라체크(Solomon W. Polachek)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분쟁을 감소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⁹³ 동 연구는 31개국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의 사건을 1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아자르 분쟁과 평화정보은행(Azar Conflict and Peace Data Bank)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정책적 시사점

일반적으로 평화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적극적인 평화’는 기아, 질병, 범죄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에서의 해방까지를 포함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분야가 기여하는 부분은 평화정착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의 중요성은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에서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2001), pp. 391~438.

⁹³ Solomon W. Polachek, “Conflict and Trade,” *Crossroads*, Vol. 5, No. 3(2005), pp. 119~151.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주의자들의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통합이 전쟁과 분쟁의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통합과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진전을 보여야 하며, 교역과 투자의 증가 등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않된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경제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969년에 혼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사이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들 국가는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이었다. 마찬가지로 1981년과 1995년 에쿠와도르와 페루가 국경분쟁을 일으켰을 때도 두 국가는 지역의 관세동맹에 참여하고 있었다.

듀마(Lloyd J. Dumas)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⁹⁴ 첫째, 균형잡힌 경제관계의 구축(establish balanced economic relationships)이다. 경제적 관계의 형성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전쟁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구조적인 폭력을 심화시킬 수도,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익의 흐름이 지나치게 일방적일 경우, 적대감을 야기하거나 충돌을 촉

⁹⁴ Lloyd J. Dumas,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What Economics can Contribute," (prepared for the ECAAR Review 2004), <www.eaar.org/Article/dumas3.pdf>.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잡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균형잡힌 관계란 이익의 흐름이 쌍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번성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며, 양국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파국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외부적 요인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다. 균형잡힌 경제관계는 이익의 균형과 함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의 균형도 중요하다. 이는 결정권을 공유한다는 것으로,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협력관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발 중시(emphasize development)의 원칙이다. 2차대전 이후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은 개도국간에 발생하거나 개도국 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국민들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한 국가나 국민들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쟁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개도국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생태학적 갈등 요소의 최소화(minimize ecological stress)의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식민지 확보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훼손 문제는 새로운 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

고 있다. 사실 우리의 팽창주의적인 경제활동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감소시킨다.

V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

1. 한반도 경제의 특성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가. 경제통합의 조건과 한반도의 여건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정책 목표의 수렴성,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기대이익의 존재,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이 그것이다.⁹⁵

(1) 정책 목표의 수렴성

정책 목표의 수렴성은 개별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치·경제적 정책 목표가 상호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국가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렴해 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통합과정을 통해서 이들 정책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상호 연계성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인(positive)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일한 공동 목표로 수렴해가야 한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정책 목표가 자연스럽게 수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치적 목표가 상위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목표를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수준, 경제체계의 특성, 산업구조 및 국제경제와의 관계 등 경제분야의 정책 환경도 남한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⁹⁵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pp. 31~33.

양측 경제정책 목표의 양립성(compatibility)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경제통합이라는 긴 여정의 출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경제통합의 목적이 시장 확대를 통한 자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있느냐, 아니면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있느냐에 따라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 확대를 겨냥한 서구형 경제통합에서는 경쟁 촉진을 통한 기술적·경제적 이익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가 유사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 참여국들의 경제구조나 발전단계에서 격차가 클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일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통해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에게도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합국가의 경제구조가 보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경제구조의 유사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발전단계와 부존의 자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구조의 이질성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보완 잠재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특

히 남한기업들이 인건비와 건물임대비의 과다로 인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이 풍부한 인력과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앞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남북간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은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경제구조의 유사성을 확대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대 이익의 존재

국가 차원에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통합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 기대 이익으로는 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 심화를 통한 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 개선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는 기대하는 이익에 있어서 남북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됨으로써 황폐화한 경제를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양측은 경제통합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통합으로 인한 기대 이익은 경제구조의 격차가 큰 초기 단

계보다는 경제통합이 진척되어 남북 경제구조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경제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 언어, 생활양식, 가치기준 등 사회·문화부문에 있어서 공통성과 동질성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클 경우 국가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의 공통성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 역시 경제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없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60여년이 넘는 분단과 이질적인 체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은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전쟁과 반목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문화적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본 특성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남북한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목표, 의식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주로 정부의 대북정책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서 통일과정의 중간 단계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많다. 근래에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가고는 있지만 경제공동체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당분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경제공동체는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치열한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달라진 문화(文化)와 의식(意識)을 서로 포용하며,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쪽의 제도와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아마도 자본주의체계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 ‘복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계획과 자유경쟁제도를 절충한 ‘시장사회주의’ 사이의 어느 지점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체계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할 경우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만, 공공(公共)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성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바, 공공성의 범주는 공동체 형성 초기 단계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경제통합 모형의 가능성 모색

가. 분단국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

정치적으로 대립관계가 유지될 경우 경제부문의 협력을 위한 국가간의 합의는 무용화되기 쉽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전쟁이나 극단적 대결의 경험이 있는 지역의 역사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분쟁의 경험이 있는 국가간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쟁 경험이 있는 국가 사이의 경제협력의 목표는 주어진 정치관계의 틀 내에서(정치적인 한계 안에서) ‘대결의 균형상태’에서 ‘공동번영의 균형상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⁶

⁹⁶ Caroline Efrati, “Economic Integration Proposals in the Israel-jordanian-

분쟁국가간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은 의존성(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상호의존성은 상대방에 비슷한 수준의 의존도를 가질 때 나타나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의 재원만 투자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경제관계를 해체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적어서 관계 단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의 규모도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존성은 한쪽이 상대방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덜 의존적인 측에서 관계의 해체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두 국가사이의 충돌이 최근에 발생했거나 상호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된다.

분쟁국가 사이의 경제통합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새로운 경제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인, ‘평화 편익(Vested Interest in Peace)’을 형성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이익을 누릴 경우, 이들은 관계 증진을 지지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관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쟁국가간의 경제협력은 정치·경제적 불안전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크다고 할

Palestinian Triangle,” Feb. 28, 1999, <www.maxwell.syr.edu/maxpages/faculty/gmbonham/2000-Fall-IR-Projects/Website-Group/ICN/Copy%20of%20ICNweb/efrati6.htm>.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간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에서 정치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발전을 토대로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변국가와의 협력이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첫째, 정치적 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 도출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국가간의 정치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둘째, 시장경제제도 도입을 포함한 개혁·개발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가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효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 의사소통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직체계의 형성, 과학기술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분쟁의 경험이 있거나 분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국가간의 경우에는 정치분야의 평화프로세스가 정체되면 경제부문의 협력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정치분야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정치지도자의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명감이 결여되고 의지와 경험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서 관계

진전에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 대결의 경험이 있는 국가간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태에 대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상생의 협력모형

경제통합 과정에서 남북경제가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본 빈곤현상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한경제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자본의 투자처로 북한경제를 활용한다는 ‘공간적 돌파구(spatial fix)’의 개념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 돌파구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에 대한 공간적 해결 방안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하베이(David Harvey)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자본은 역사적 속성상 물품교환과 투자대상을 위해 장기간 축적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축적되면 미처 사용하지 않는 자본과 그에 따른 미사용 노동력이 사회에 존재하게 되어 자본의 과잉축적에 따른 자본과 노동력의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⁹⁷

⁹⁷ 임성훈, “남북비즈니스모형 개발 메커니즘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貿易學

자본주의의 발달로 잉여 자본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은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지만 이 역시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확장으로 인하여 금융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아지게 된다. 이 때 ‘공간적 돌파구’를 통해서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지대(地代)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투자하거나 자본과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과 같은 공간적 조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간적 조정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진행된다. 첫째는 국가 내에서 부분적인 해소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는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미래 소비를 위한 기금을 축적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는 축적된 자본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한 지리적 확장 방식이다. 새로운 공간에서는 잉여자본이 새로운 형태로 노동력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투자자본의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유입현상은 대표적인 공간적 조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임성훈에 따르면, 남한의 과도한 자본 축적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적 조정의 대안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남한에서 축적된 자본의 새로운 생산적 결합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⁸ 남한의 기업들의 신규투자 부족, 대기업들의 자본 축적을 증대,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경제정상을 침체 현

會誌』 제31권 제3호(2006년 6월), pp. 85~108. 이후의 논의는 임성훈 논문을 기초로 정리된 것이다.

⁹⁸ 위의 글.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중국이 대규모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지역에 대한 투자수익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체 공간으로 북한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이나 언어의 소통 등은 북한에 대한 기대수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성훈은 또한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 경제메커니즘이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하는 남북한 경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부문에서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행기경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경우와 선진경제로의 도약과정에 있는 남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병목현상의 수준과 증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남한경제는 시장수요와 투자수요의 부족 및 적합한 경제메커니즘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북한경제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한경제의 수요 부족현상을 극복하고 경제메커니즘의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위기 돌파라는 대안은 한동안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2부문 경제발전 모형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발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과 같이 경제운영체계가 다르고 경제발전 수준과 생산여건에서 격차가 큰 국가간의 경제통합을 다루는 이론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루어져 온 국제사회의 경제통합작업이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단순히 시장 확대, 무역자유화, 경쟁력 강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통합이 국가간의 경제력 격차를 확대할 수 있으며,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중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과 같이 경제적 특성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제의 통합 효과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강구하기 위해서 단일 경제권 내에 전통적인 산업부문과 현대적인 산업부문이 병존하는 ‘2부문 경제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경제모형(dualistic economy model)라고도 표현되는 이 모형은 이중성(dualism)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중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정치·경제·사회적 행태에 대한 차이점과 함께 경제발전 과정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차이점 등이 반영된 다양한 가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시스템, 인종적 배경, 생산 조건, 인구행태, 소비지출과 저축의 행태, 그리

고 대외관계 등의 관점에서 이중성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⁹

일반적으로 2부문 경제모형에서는 경제부문을 농업부문과 1차 산업을 포함한 전통부문과 2,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 부문(또는 현대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는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도 선진화된 농촌기업이 존재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도 수공업과 같이 전통적인 부문이 상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한 경제의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시-농촌 2부문 경제모형을 일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생산, 소비, 인구분포 등에서 나타나는 부문간의 차이가 경제발전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생산활동은 도시 부문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부문의 소비행태와 인구분포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부문 경제모형은 동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그 격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문간의 차이점이 완전하게 해소되려면 절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경제에서도 어느 정도의 격차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문간의 격차가 해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⁹⁹ Allen C. Kelly, Jeffrey G. Williamson and Russell J. Cheetham, *Dualistic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p. 8~9.

이중경제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과제는 격차를 해소하는 기간(*adjustment lags*), 정보 비용(또한 정보 비대칭성), 시장의 불안정성(특히 불완전경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문간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 요인과 파급효과 등에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중경제모형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이중경제구조를 설명하는 수리경제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산 기술, 기술발전의 성격, 생산요소의 공급, 생산요소의 이동성, 생산요소의 가격결정체계, 상품 수요의 성격,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시장의 균형체계 등의 변수들이 반영된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서 균형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¹⁰⁰ 이러한 방정식 체계는 특정 부문의 변화가 다른 부문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이중경제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를 위한 과도한 가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각종 변수에 대한 자의적인 설정 등으로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방법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추정하는 수준에서 활용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

경제통합이란 ‘하나의 과정(a process)’이자 ‘수단(a means)’이라고 할 수 있다. ‘수단’의 의미에서는 관련 국가가 경제통합을 통

¹⁰⁰ *Ibid.*, pp. 23~57.

해서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은 참여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산업의 분업체제를 형성하고,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통합의 핵심은 상대국가의 경제상황 및 정책 등이 고려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통합의 내부지향적(inward-looking)인 접근방식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통합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보다 발전된 상태를 지향해 나가는 끝이 없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통합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practically unlimited)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과 정부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 한반도 경제통합의 비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경제통합의 비전으로는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를 추구하면서 지역통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향해 나가는 열린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면서 시장에 친화적인 경제공동체 건설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¹

¹⁰¹ 임강택,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전략,”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176~177.

(1)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 지향

경제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경제가 확대 재생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이 중시되면서 균형잡힌 분배정책을 통해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경제사회 질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의 발전은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의 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성장촉진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열린 경제공동체 건설

남북경제의 협력이 확대되면 경제통합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점차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만들어갈 경제공동체는 우리 사회 내부와 남북간의 합의를 기초로 외부세계를 향해 개방된 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차별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일치라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내부의 화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적인 요소는 남과 북이 상대측에 경제·문화적으로 충분하게 개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개방은 지리적, 제도적인 개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정서적으로도 상대방을 포용하는 통합과정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는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개방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지역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상생의 민족공동체 형성

남북경제의 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 작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과제는 ‘우리가 추구할 경제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어떤 것인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남북이 지향할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다르고 경제발전의 격차가 크며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에서의 괴리가 큰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공동체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제3의 모델로 ‘연리지(連理枝) 공동체’를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¹⁰²

<연리지의 의미>

뿌리가 다른 나무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희귀목을 연리지(連理枝)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자라게 되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고사하게 되는데, 가지를 연결하여 영양분을 나눠 갖음으로써 혼자였을 때보다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연리지 현상의 놀라운 점은 두 나무가 붙어서 하나가 되었지만 각자가 지니고 있던 본래의 성격과 기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흰 꽃을 피웠던 나무에서는 여전히 흰 꽃이 피고, 노란 꽃을 피웠던 나무에서는 그대로 노란 꽃이 핀다는 것이다. 뿌리가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한 몸을 이루어 성장하면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남북한도 서로의 양분을 주고받아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면서도 완전한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는 상대방의 특성을 존중하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연리지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각자가 자신들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인 경제발전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당분간 남겨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임으로써 경제통합에 대한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¹⁰² 위의 글, pp. 213~214.

나. 경제통합의 추진 방향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지향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면서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장기간 대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면서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의존도를 제고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1) 성장 동력의 창출

남북간의 경제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 경제에 성장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북한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남한경제와의 통합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부존자원을 결합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이 완성될 때까지는 남한경제와 북한경제가 독자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각각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비교우위는 대륙으로의 육상 진출로가 열리는 점을 활용한 물류산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북한의 지

하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러시아 에너지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에너지산업 역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경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북한 이전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조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IT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우선적으로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황폐화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작업과 남북간의 산업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현대화시키고, 산업인프라의 남북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 인력을 재교육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간 경제통합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인력을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다고 하고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한경제의 차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의 둔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경제의 생산 요소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남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지역간 격차 해소

경제통합의 부작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거나 특정지역에 경제통합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물론,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여러 지역으로 전략적 투자지역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이 남한기업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장소로만 이용되거나,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남한에서 선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북한지역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축소하는 일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한의 사양산업을 이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고가 확산될 가능성도 경계되어야 한다.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지역이 조기에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인프라와 같이 물리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작업과 함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¹⁰³

남북경제가 통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역사적

¹⁰³ 위의 글, pp. 181~182

경험이 주는 교훈은 국가경제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존관계의 심화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 간의 경제관계가 단순한 양적 증대만을 추구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 경제관리 및 운용체계의 차이, 경제의식의 차이 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북한의 인재양성 작업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경제가 상호의존도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효율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에 친화적인 한반도 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자본주의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체제로 지향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북한지역에 시장경제를 도입해 가는 과도적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당국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4) 평화정착에 기여

남북한 경제통합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경제적 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 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안보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차원의 협력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동북아 교통망을 한반도 교통망과 연결하여 운행하는 교통 연계망 구축사업과 에너지 공동개발 및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TKR의 연결과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TKR과 TSR 및 TCR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도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의 협력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차원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남북 경제통합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 정착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간간에 균형잡힌 경제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의 빈곤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궁핍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시 동북아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빈곤 해소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 경제통합의 추진 방식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지는 과정에서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에는 초기 단계와 완성 단계에서 통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과정이 진행되면서 통합하는 방식이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에 적용할 경제통합의 방식은 동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통합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적용하는 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표 V-1> 경제통합의 동태적 접근

초기 단계	성숙 단계	완성 단계
기능적 통합에 제도적 통합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	제도적 통합의 비중 확대	제도적 통합
초기에는 수직적 통합이 불가피	수평적 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수평적 통합
기능주의적 통합	연합주의,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 도입	연방주의적 통합
부문별 통합	부문별 통합 확대	전면적 통합
소극적 통합정책	적극적 통합정책으로의 전환	적극적 통합정책

(1) 경제통합의 형성 주체와 통합의 동기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이 누구이고, 통합을 추진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경제통합을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정부간 합의에 의해서 통합의 조건과 형태를 결정하는 경제통합 방식을 제도적 통합이라고 하고 시장내에서의 이운동기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국제적 차원의 경제활동이 집중됨으로써 지역경제권이 형성되는 현상을 기능적 통합이라고 한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면서 민간부문의 진출이 어려운 북한의 산업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대북투자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기 단계에서는 기능적 통합에 제도적 통합을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성숙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통합 과정을 주도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완성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과정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는 경제통합의 속도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이 단계에서의 남북한의 정치·경제·안보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인 고려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남북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면적,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다.

(2)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상호간의 결합관계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경제주체간의 관계가 수평적 상호의존관계인가 수직적 보완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의 구분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의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가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력, 그리고 대외 영향력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경제의 발전수준과 경제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경제가 수직적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측의 거부감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부터 북한경제가 스스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한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작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육성작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숙 단계에서는 북한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발전단계를 압축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북한지역에 중공업분야와 에너지산업을 특화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 경제통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수평적 의존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완성 단계에서는 남북한간의 경제발전 단계 격차가 보다 완화되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수평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차원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통합추진의 목표와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통합을 추진하는 목표와 통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가에 따라 연방주의적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으로 구분하며,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연합주의적 통합과 신기능주의적 통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초국가적인 기구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연방주의적 통합은 정치적인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변

수로 작용하는 기능주의적 통합은 국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구하면서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사회적 분야의 기능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초국가적인 체제의 구축이라는 연방주의적 통합방식의 목표를 추구하는 신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은 ‘기능주의의 탈을 쓴 연방주의’라고 평가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는 ‘경제통합의 형성 주체와 통합의 동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의 여건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숙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을 관리할 당국간의 협력체 구성이 요구되며,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접근과 연합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시되는 협력의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경제통합의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완성 단계에서는 초국가적인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변수가 통합과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적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4) 통합대상 영역의 크기

통합대상 영역이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이냐에 따라서 부문별 통합과 전면적 통합으로 구분된다. ‘부문별 통합’에서는 통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동 생산 등을 추진함으로써 부분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전면적 통합’에서는 관련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전격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

남북간의 경제통합에서는 초기 단계에는 부문별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경제의 수용능력이나 남북경제의 발전단계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통합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역 등과 같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통합 실험을 추진하여 서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숙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을 실험하는 지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상품시장처럼 북한경제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통합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부문의 통합을 추진한다. 남북경제의 이질감을 고려할 경우, 부문별 통합과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통합과 화폐통합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의 통합은 가장 나중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성숙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의 완성을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적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완성 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노동시장과 화폐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이 남북경제·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할 때, 최종 단계의 통합 절차는 추진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경제통합의 목표

경제통합의 당면 목표를 역내시장의 확대에 두느냐, 아니면 역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통합에서는 특혜무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둔다. 반면에 적극적 통합은 공통관세와 같은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소극적인 통합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통합 여건이 보다 성숙됨에 따라 점차 적극적인 통합을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통합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 최근의 상황 전개와 시사점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 등 경제통합 추진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수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직후 실시한 <사회동향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위기의 가장 큰 책임자’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51.7%)을 꼽았으며,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중앙일보와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78%와 71.9%가 대북포용정책을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책임론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은 점차 축소되었다. 지난 10월 15일 내일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정권(35.5%), 한국정부(32.3%), 미국정부(28.5%)로 나타나 공동의 책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15.2%에 그친 반면, 73.0%가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현재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9%로 나타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 압력에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중앙일보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42%,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53%이었으며, 같은 날 SBS 여론조사 결과는 남북경협 지속이 52.9%, 중단 의견이 44.4%였고, MBC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의견이 42.3%, 전면 중단과 점차 축소하자는 의견을 합쳐 53.9%로 나타났다. 그리고 15일 실시한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61.8%의 응답자가 남북경협을 지지했고, 32.9%만이 경협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추진 여건은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확대와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가 10월 27일 대북 제재대상과 반출입 금지품목을 잠정 합의했다.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반출입 금지품목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생화학무기 관련 품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은 필요할 경우 각국이 정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한다는 안보리 결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사치품에 대한 제재는 사치품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각국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제재대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192개 유엔 회원국 전체로 준수 의무가 확대되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 정부의 PSI 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손 매코맥(Sean McComark)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의 방한 의제 가운데 한국의 PSI 참여가 포함돼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PSI

참여 결정을 계속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정부의 남북경협 사업 재검토와 PSI 참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부의 이행 방안과 관련해 쌀·비료 추가지원 중단, 수해복구 물자지원 유보, 철도·도로 자재 장비인도 유보, 개성공단 1단계 2차 단지분양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당국차원의 경협과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 등 제재대상을 지정하면 이들과의 교역·투자 관련 대금의 결제와 송금을 통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와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와 북한의 남북경협 지속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북경협의 추진 동력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표적인 경협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정부의 추진 의지와 상관없이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2. 정부의 접근 전략: 평화프로세스와 경제협력 병행 추진

세계 역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국간 경제협력은 정치적 관계의 진전을 통한 평화정착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급격한 경제통합 역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증진이라는 일방향적 전략의 실효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평화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박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북한측 책임을 엄중하게 따지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평화가 정착 이후에야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수단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견해도 경계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사례를 보면,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은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해왔으며, 두 가지가 병행해서 추진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작업과 경제협력의 잠재적 효과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가. 정경연계 vs. 정경분리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려되었던 북한의 핵보유가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왔던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철저한 정경연계 정책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 왔던 정경분리 원칙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경분리 원칙은 정치적 상황 변화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정치적 상황 개선에 필요한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경분리 원칙의 수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상당량의 경제 지원의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 역시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은 아직도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남북체제의 이질성과 북한정권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포용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사태로 대북포용 정책 전체의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른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동의를 결집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핵을 용인하지 않으면서도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경연계, 남북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정경분리라는 이중화 전략을 기본입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의 연계 추진

정경연계와 정경분리의 이중화 전략의 다른 측면은 평화 증진과 경제협력 확대 노력을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평화 증진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와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소위 5대 신경협사업의 추진,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문제 등이 순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최소한의 추진 동력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있다. 이런 점에서 민·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 또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연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진전되는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인 접근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차원의 추진 과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확산 움직임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의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통합 노력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통합 노력은 당분간 간접적이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격앙된 분위기가 안정되고 남북간의 경색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민간단체를 활용한 남북협력의 모멘텀 유지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화되더라도 민간차원의 대북협력의 기본 틀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되 필요할 경우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북한에 현금이 지원되지 않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남북협력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묵시적인 용인이나 동의의 표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달해야 한다.

나. 북한경제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추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핵문제의 원만한 타결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대한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북한체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보하고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개발계획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경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어 왔던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했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료의 접근성으로 인하여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탈북자들의 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접한 평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다. 남북한을 포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경제발전계획의 청사진 마련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북한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협력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측면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지역 전반을 염두에 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에 대한 협력사업을 구상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이나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한반도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있지만 북측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었다. 따라서 남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한반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청사진에는 공동번영의 비전과 경제협력의 추진 방안, 그리고 남북한의 추진 역량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추진 방안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전제로 하는 점진적인 접근 전략을 중심으로 하되, 급격한 사태 변화에 대비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

나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국내의 경제통합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마련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든지, 또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대비 태세는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⁴

우리 사회의 준비 상황은 인적 부문, 제도적 부문, 물리적 부문, 그리고 재정·금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부문의 준비는 남북경제통합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해 나갈 행정인력과 남북간 경제체제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의식격차를 완화시켜 나갈 교육인력, 그리고 북한지역의 변화를 감당할 전문인력 등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포함한다. 제도적 부문의 준비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물리적 부문은 남북한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산업인프라의 구축 작업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금융 부문의 준비는 소위 ‘통일비용’의 조달 방안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에는 북한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

¹⁰⁴ 양문수 외,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5).

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발지원 전문가를 양성하여 관련 업무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온 그들의 업무 능력이 우리 보다 앞설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도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관련기관들이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차원에서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사업 관련한 우리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해외 관계 기관 파견 및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면서도 교육·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간단체(NGO) 및 연구기관의 개발협력분야의 전문가 육성작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MF, World Bank, ADB, EBRD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박제훈.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이론.” 『KIEP 지역경제』. 1994년 6월호.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 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2.
-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2.
- 양문수 외.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임강택.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전략.” 『동북아구상과 남북 관계 발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임성훈. “남북비즈니스모형 개발 메커니즘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31권 제3호(2006년 6월).
- 제성호 외.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2003』. 서울: 통일부, 2003.
- 통일부. 『통일백서 2005』. 서울: 통일부, 2005.

2. 북한 문헌

-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2돛에 즈음하여(1952년 10월 25일).” 『김일성 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1967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기자들의 파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한 축하연설(1969년 9월 18일).” 『김일성 저작

- 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와 한 담화(1972년 6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정일. “신문편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로동신문사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11월 13일).”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 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2년 2월 26일, 28일).”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사회과학원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3. 외국 문헌

- Badinger, Harald. “Growth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the case of the EU Member States(1950~2000).” *IEF Working Paper*. No. 40, 2001.
-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1.
- Baldwin, R. E.. “On the Measurement of Dynamic Effects of Integration.” *Empirica*. Vol. 20, No. 2, 1993.
- Bjola, Corneliu. “Romanian Political Horizons: Political Sovereignty, European Integration and European Elections.” <http://student.ong.ro/Nr7_eng.htm>.

- Brodzicki, Tomasz. "In Search for Accumulative Effect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alizy I Opracowania*. March 2003.
- Cohen, Jeffrey P. and Catherine Morrison Paul. "Production Externalities, Integration and Growth: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Single Market'." Harry Bloch. ed.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Global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Press, 2003.
- Diez, Thomas and Antje Wiener. *European Integration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Dumas, Lloyd J..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What Economics can Contribute." (prepared for the ECAAR Review 2004). <www.eaar.org/Article/dumas3.pdf>.
- Efrati, Caroline. "Economic Integration Proposals in the Israel -jordanian-Palestinian Triangle." Feb. 28, 1999. <www.maxwell.syr.edu/maxpages/faculty/gmbonham/2000-Fall-IR-Projects/Website-Group/ICN/Copy%20of%20ICNweb/efrati6.htm>.
- Gartzke, Erik, Quan Li and Charles Boehmer. "Investing in the Peac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2001.
- Godinho, Manuel M. and Ricardo P. Mamede.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Europe: what are the main issues?(preliminary Draft. 1999.5.26)." <[www.pascal.iseg.utl.pt/~converge/pdfs/\(6\).pdf](http://www.pascal.iseg.utl.pt/~converge/pdfs/(6).pdf)>.
- Henrekson, Magnus and Rasha Torstensson. "Growth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No. 1465. 1996.
- Jones, Erik. "Idiosyncrasy and integration: suggestions from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1. February 2003.
- Jovanović, Miroslav 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 Kelly, Allen C., Jeffrey G. Williamson and Russell J. Cheetham.

- Dualistic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Landau, Daniel. "The Contribution of the European common Market to the Growth of Its Member Countries: An Empirical Test."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131, 1995.
- Lejour, Arjan M., Vladimir Solanic and Paul J. G. Tang. "EU accession and growth effects: Does EU accession stimulat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ew member states?." 30 April 2004. <www.cpb.nl/nl/org/homepages/anl/EU_enlargement_GTAP.pdf>.
- Machlup, F.. *A History of Thought on Economic Integration*. London: Macmillan, 1979.
- Meade, J. E..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msterdam: North-Holland, 1955.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3.
- Mochizuki, Mike M. "Security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Shorenstein APARC." May 1998. <<http://iis-db.stanford.edu/pubs/10089/Mochizuki.pdf>>.
- Myrdal, Gunnar. *An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6.
- Oneal, John R. and Bruce Russett. "Assessing the Liberal Peace with Alternative Specifications: Trade Still Reduces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4, 1999.
- Petrakos, G., A. Rodriguez-Pose and A. Rovolis. "Growth, Integr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in Europe." <www.ersa.org/ersaconfs/ersa03/cdrom/papers/46.pdf>.
- Polachek, Solomon W.. "Conflict and Trade." *Crossroads*. Vol. 5. No. 3, 2005.
- Rees, Andreas and Michael Sonnenholzner. "Competition among the regions in EUROLand: "rich here-poor there"?" <http://www.hypovereinsbank.de/media/pdf/rese_eust_ripo_engl_29366.pdf#search='competition%20among%20the%20regions%20

in%20EUROland'>.

Tinbergen, J..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Elsevier, 1954.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s*. London: Stevens & Sons Limited for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Weiss, B. M. "The Economics of Integration. The Politics of Regionalism: Interdependence and Integration Theory revisited."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40th Annual Convention. Washington. D.C. Feb. 16~20. 1999.

4. 기타자료

<<http://homepages.uel.ac.uk/K.Bain/regional.html>>.

<www.jppe.euw-frankfurt-o.de/Lehre/wise2006/lecture%205-1-2006%20-%20theory.pdf>.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헌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 · 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 · 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비매품 ◆

통일 정세 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